

與 강행·野 필리버스터…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두고 격돌

개정안 통과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국힘, 규탄대회 열고 법안처리 비판 오늘 본회의서 연장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종합특검 연장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종합 특검 연장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늘어나며, 특검 과건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의 직전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 직무대행은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에서도 내란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

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란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

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후 본회의장 앞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처리 반대 구호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의 규탄사를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란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알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다.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면서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 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특검을 왜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

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그동안 주어진 수사 기간을 이미 다 썼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되는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특검은 먼저 (연장하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수사 기간이 짧아서’, ‘수사가 미진해서’, ‘새 의혹이 나와서’, ‘수사 성과가 없어서’라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이 된다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여권은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21일 오후 2차종합특검 연장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공명선거 다짐했지만… 與 당권주자 ‘난타전’ 국민의힘, 이번주 윤리위 열고 징계 착수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공개 발언 등서 견제하며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공명 선거를 다짐했다. 다만,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거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에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기호 순)가 후보 등록했고, 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이건태·이성운·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모두발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기점으로 선의의 경쟁과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의 당부와는 달리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강한 메시지를 내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이였다. 송영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당권주자 김보미(왼쪽부터) 전 강진군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선 전 총리, 고민정, 송영길 의원이 서약서에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예비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임 대표인 정청래 예비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당청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가 정 예비후보라며, 전당대회 시 국민의힘 지지자의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송 예비후보는 “우리 내부에도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예비후보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 핵심 지지층에 실망

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소청·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의원총회에 제가 앉아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다”며 “이런 주장을 절대 다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예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대표, 주말까지 시위 참여

국민의힘이 이번 주중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소집하고 6·3 지방선거 전후 당원으로부터 접수된 60여건의 징계요구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당은 책임과 규율이라는 원칙 아래서 운영되는 정치결사체”라며 정상적인 절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오는 25일 경남 김해시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참정권 훼손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른바 ‘징계정치’로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질문에 “윤리위는 당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칙인 책임과 규율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당 지지율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로 접수된 징계요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선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는 이른

바 ‘단풍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훼손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복당이 언급되는 시점부터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은 대야공세를 할 때고 특정인의 복당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단정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1%), 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0.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 참여는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장 대표는 오는 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훼손 규탄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25일 경남 김해시와 대구광역시를 각각 방문해 시위 현장을 찾는다. /박태홍 기자

靑, ‘기업 초과이윤 배분’ 수보회의 연기

추가 논의 필요하다는 판단

청와대는 20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는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주제와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취소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선 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 등 각 수석실이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관련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날 오전 안전상 정 자체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소 배경에 대해 “주제 및 일

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사회적 투자 논의를 초과세수에서 초과이윤으로 넓히려면, 사회적으로 관련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후에 청와대에서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촉발된 국내 증시 하락세도 회의 취소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靑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사진)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